

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

2025. 5. 28.(수)



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

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회의(2025. 5. 28.)

I. 의결주문

- 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II. 의결(안)

- 기본정책 및 당헌(제8조) 개정

구 분	주요 개정 내용
기본정책	○ 청와대 ⇨ 대통령실 용어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
당헌 (제8조)	○ 대통령의 당무 관여 금지, 계파불용 명문화

※ 별첨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23조, 제90조

[당헌 제23조(기능)]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강령 · 기본정책 · 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

[당헌 제90조(개정의 발의)]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
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기본정책

현 행	개 정 안
<p>5-3 (국민에 의한 권력기관 개혁)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. 이를 위해 경찰, 검찰 등 권력기관의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. <u>청와대의</u> 수사기관 관여 행위를 금지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 검찰, 경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는 <u>청와대</u>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구가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. 권력형 비리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.</p>	<p>5-3 (국민에 의한 권력기관 개혁)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. 이를 위해 경찰, 검찰 등 권력기관의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. <u>대통령실의</u> 수사기관 관여 행위를 금지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 검찰, 경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는 <u>대통령실</u>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구가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. 권력형 비리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.</p>

□ 당헌

현 행	개 정 안
<p>제 8 조 (당과 대통령의 관계)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·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.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 8 조 (당과 대통령의 관계)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·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.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. ③ <u>당내 선거 및 공천, 인사 등 주요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.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 8 조의 3(계파불용)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